

광주 지산유원지 개발계획 다시짠다

35년째 방치…주민들 공영개발 등 요구

강시장 “주민·기관 등 참여 TF팀 구성”

유원지 시설로 결정된 뒤 35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개발 계획이 재수립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부도, 광주시 예산 부담에 따른 공영개발 불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지산유원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광주시, 동구청,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간사업자가 없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지산유원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광주시, 동구청,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5년 유원지 시설로 둑인 동구 지산

동 일대 92만9857㎡ 면적의 지산유원지는 구도심 내 대표적인 유원지였으나 대부분의 면적이 미개발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이기종 지산유원지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산유원지 내 상가 대부분이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로 지정돼 있어 민간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면 공공자금을 통해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무턱대고 유원지 시설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나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을 확실히 추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

라고 말했다. 또 강 시장은 “현재 동구청과 접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받아본 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개발계획은 현재에 맞게 수립돼야 할 것”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시장은 주민대표들이 제2순환도로에서 지산유원지에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 및 지산유원지 주차장 설치 등을 요구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의 절차를 거쳐 시비 또는 민자로 시행하도록 관련 실무에 시달렸다.

지산유원지 진입로는 0.9km로 모두 57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고위직 인사

기획조정실장 이종범씨

의회사무처장 이희봉씨



이종범 실장 이희봉 사무처장



다도양민 희생자 위령비 제막

회 위원장과 임성훈 나주시장, 김덕중 나주시의회 의장, 김원국 나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 제관에 송영철(50·행시 28회)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이희봉(55·행시 31회) 지방세제관을 전남도로 전출하는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도 의회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 전 지방세제관은 담당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과장, 정정정책팀장 등을 역임한 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을 지냈다.

송 기획조정실장 후임으로는 이종범(56·행시 23회) 전남도 의회사무처장이 임명된다. 여수 출신인 이 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도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관공문화국장, 목포부시장 등을 지냈다./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北 천안함사건 불구

테러 지원국서 제외

미국은 5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입장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09년 테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 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다.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증거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천안함 사건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밝혀 왔다.

/연합뉴스

손학규 정계복귀…민주 당권경쟁 본격화

8~9일께 2년간 침거생활 정리 기자회견

대의원 여론조사 타후보군에 5~15%P 앞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2년 간의 충전 침거 생활을 정리하고 정계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6일 “여전 형식으로 할지 최종 정리되자 않았지만 8일 또는 9일 기자회견이나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계 복귀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 측근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며 “저를 비롯한 손 전 대표 주변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혁신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 지난 2년간 반성의 결과물로 사회 양극화와 남북관계 등 국가 현안 및 미래 과제와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변화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

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 전 대표 진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생 정치적 동지였던 이강철 전 청와대 민주화수석을 좌장으로 범동교동계의 박양수 전 의원이 조직책으로 합류했다.

원내에서는 김부겸 신학용 전 혁신회 서장과 이찬열 이운석 의원 등 10여명이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손 전 대표는 전대 국민들이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정 고문과 정 전 대표 등 후위그룹에 5~15%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나타나고 있다.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와 함께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등 다른 유력 당원 주자들도 내주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선거캠프를 가동할 계획이어서 당권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는 구체적 시기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8월18일) 이전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일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출마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 전 대표는 혁신정치 복귀를 선언하면서 지난 2년간 반성의 결과물로 사회 양극화와 남북관계 등 국가 현안 및 미래 과제와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변화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

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어 “부분보존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추진단은 철저히 밀실·독단행정으로 일관했으며,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책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추진단이 전당사업의 조속한 진전을 바란다면 일방적·독단적 행태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협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옛 도청별관의 보존방안으로

케이트 방식(도청별관을 빼어 통로를 내는 방안, 일정 5월의 문)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케이트 방식이 옛 도청별관의 외형과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기동과 보, 바다의 혼이 없는, 사실상의 원형보존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추진단의 부분보존안은 현존하는 사적지의 심각한 혼이며 5·18항쟁 당시의 원형과 기억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철안”이라며 “외딴 건물의 방치와 자연소멸을 기다리

는 결국 완전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부분보존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추진단은 철저히 밀실·독단행정으로 일관했으며,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책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추진단이 전당사업의 조속한 진전을 바란다면 일방적·독단적 행태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협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옛 도청별관의 보존방안으로

케이트 방식(도청별관을 빼어 통로를 내는 방안, 일정 5월의 문)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케이트 방식이 옛 도청별관의 외형과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기동과 보, 바다의 혼이 없는, 사실상의 원형보존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추진단의 부분보존안은 현존하는 사적지의 심각한 혼이며 5·18항쟁 당시의 원형과 기억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철안”이라며 “외딴 건물의 방치와 자연소멸을 기다리

시설

광주 자치구별 문화불균형 너무 심하다

광주지역 자치구별 문화시설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내 공연·전시, 도서관, 문화복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128곳이었다. 하지만 같은 문화시설은 대부분 동구과 서구·북구에 집중돼 있고 남구와 광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다.

광주시 인구의 23.92%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의 경우 문화기반 시설은 15곳으로 인구 7.5%에 불과한 동구의 32곳에 비해 절반도 안됐다. 그나마 15곳도 복지시설이 대부분이고,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은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의 14.90%가 거주하고 있는 남구 역시 공연시설은 2곳, 화랑은 1곳에 지나지 않았다. 남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별 불균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광주시는 지역별 불균형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고루 잘 살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 한다. 그것이 바로 강운태 시장이 시정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광주를 ‘행복 도시’로 만드는 첫 걸음이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통해 담배 살 수 있다니

급연은 건강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자랑점이다. 흡연율은 문명국가 여부를 재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30곳에 걸친 성인 흡연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15.3%, 19.2%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의 흡연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현재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남녀 포함) 흡연율은 각각 11.1%, 13.7%에 달하고 특히 남학생 흡연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15.3%, 19.2%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금연정책 탓이다.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담배 구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들어가 담배 한갑당 500~1500원의 ‘웃돈’만 얹어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주민등록증 두 번째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참고서 표지의 바코드 팁틀에 찍혀있는 숫자를 떼서 주민등록증에 붙이면 성인용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광주 북구 모 고교의 경우 3학년 학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않을 수 없다.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판매할 수 없도록 엄연히 규정돼 있다. 정부는 당장 인터넷 카페를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흡연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위조·변조가 위법이라는 사실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는 것이다.

여야 ‘4대강 입장선회’ 공방

한나라 “단체장 생각 달라졌다… 야 정치공세 중단을”

민주당 “찬성쪽으로 아전인수식 해석… 치졸한 행동”

여야는 6일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앤센트 회장의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흥보로 민주당이 마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우린 4대강 사업에 대한 무조건 반대나 찬성이 아니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어렵게 만든 4대강 사업 대안을 여당이 4대강 사업 물타기용으로 써먹는 건 매우 아비하고 치졸한 행동”이라며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어 사업을 검증해 나가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아건 광역단체장들은 행정권한을 쥐고 모든 자료를 들여다본 상태에서 4대강 사업에 접근하는 반면, 민주당은 선언적, 이념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4대강 사업이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엉터리라고 너무 알잖아봐선 안 된다”며 “공사중단 주장은 무책임하고 민주당이 실증적 문제점을 제시해온다면 일마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성으로 돌아선 것처럼 정부가 아전인수식 흥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준설공사 최소화 및 대형보 건설 제거,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 등을 차지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아건 광역단체장들은 행정권한을 쥐고 모든 자료를 들여다본 상태에서 4대강 사업에 접근하는 반면, 민주당은 선언적, 이념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4대강 사업이 실패하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야당은 4

대강 사업이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해 하천생태를 보존하고 흥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강을 정비하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치사수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